



정책/제도

국내의 AI 분야의 정책 현황

■ 개요

- 최근 AI 분야의 국제적 이슈는 AI가 초래하는 위험에 주목하여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AI의 위험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AI 활용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과 더불어 AI에 의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규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화 수립을 추진
 - * 미국 MIT에서 발행한 과학기술분석 잡지 MIT테크놀로지 리뷰는 2024년 AI 시장에 대해 정책과 규제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화하는 AI 법제화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각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AI를 규제하는 법제화를 시도할 것이라 예측
- 전례 없는 AI 기술의 발전은 사회와 경제 시스템, 나아가 인류의 삶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AI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도구로서의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하고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여 인류와 AI가 공존하기 위한 과제로서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한 정책이 필수적이며, 이에 국가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AI 정책에 대한 현황과 이슈에 대해 확인

■ 주요 내용

1. 미국과 중국의 AI 회담 개최

- 미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고위급 대표단을 구성하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AI의 안전과 위험 관리를 위한 첫 비공개 회담을 개최. 이번에 열린 AI 회담은 미중정상회담에서 AI 관련 정부 간 대화 채널을 열자는 양국 간의 합의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중국에서는 과학기술부,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사이버공간관리국, 공업정보화부, 중앙외사판공실 등의 대표가 참석했으며, 미국에서는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상무부의 대표가 참석

- 양국은 회담에서 AI의 안전과 위험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공유하였으며, 국가안보회의에 따르면 미국은 AI의 이점 실현을 위해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글로벌 합의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특히 중국은 자국 내에서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미국은 여전히 중국이 미국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AI 기반 딥페이크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중국의 AI 오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AI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유엔의 역할 확대와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AI 거버넌스 체계와 규범을 수립할 의향을 밝히는 한편, AI 분야에서 미국 반도체의 수출 제한 등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제한과 압박에 대해서도 엄중한 입장을 표명
- AI 기술의 발전이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수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갈등 관계에 있는 양국이 첫 AI 회담을 갖고 지속적인 대화의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협력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번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

[표 1] 올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조치

1월	네덜란드 기업 ASML에 심자외선(DUV) 대중 수출 중단 요구
4월	대중국 범용 반도체 추가 제재 방안 검토
5월	인텔과 퀄컴에 내어준 화웨이 반도체 수출 면허 취소
6월	대중국 차세대 반도체 기술 통제 검토
8월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중 수출 규제 논의

*출처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CUKFRV3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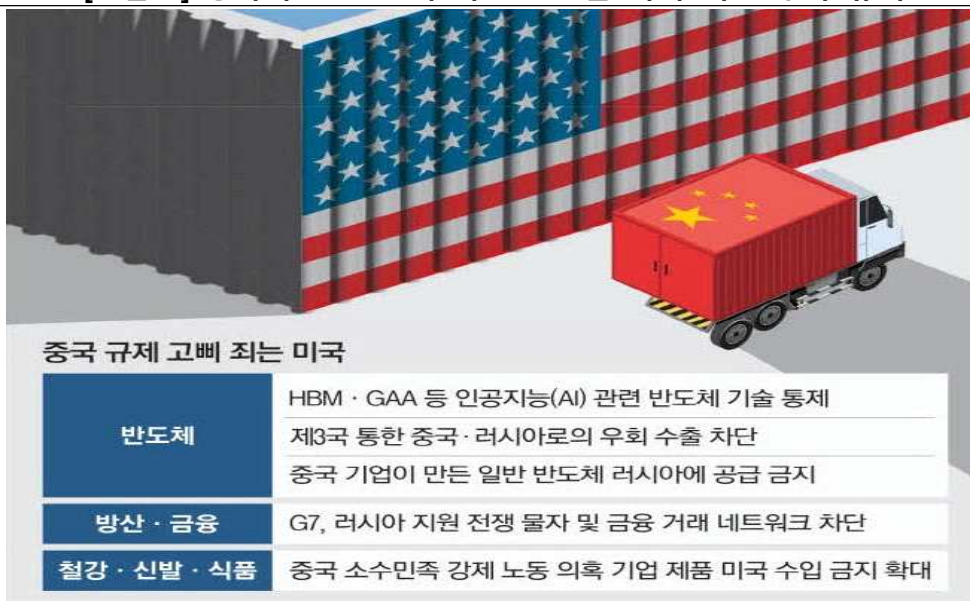
2. 미국 상무부의 첨단 AI 모델 수출 규제 검토

- 미국 상무부는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나 생물학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에 대한 첨단 AI 모델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검토. 미국은 군사 목적의 AI 기술 개발을 막기 위해 첨단 AI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 왔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규제를 보완할 방침
- 미국 상무부는 챗GPT와 같은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첨단 AI 모델 중 소프트웨어와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폐쇄형 모델의 수출을 제한

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은 중국이 단호히 반대하는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이자 일방적 괴롭힘이라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논평

- 현재 AI 기업들은 정부의 감독 없이 전 세계에 AI 모델을 제공 중으로 미국 정부와 민간 연구자들은 적대국이 AI 모델을 사용해 사이버 공격을 하거나 강력한 생물학 무기를 만들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월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정부와 연계된 해킹 그룹이 LLM을 이용해 시도한 해킹을 추적했다고 보도하면서, 사이버 공격자들이 AI를 이용해 더 방대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사이버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그림 1] 중국의 AI 반도체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



*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1039941>)

3. 미국 국토안보부의 AI 안전보안이사회 설립

- 미국 국토안보부는 오픈AI, MS, 구글,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CEO를 자문위원으로 하는 연방 자문기군인 AI 안전보안이사회(AI Safety and Security Board)의 설립을 발표. 이사회는 국방, 에너지, 농업, 운송, 인터넷 등 국토안보부가 관할하는 16개 산업의 주요 기반시설에서 AI 기술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배포 방안에 대해 국토안보부에 자문을 제공할 예정

* 샘 알트만(Sam Altman) 오픈AI CEO,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MS CEO,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CEO,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 알파벳 CEO 등 기업 대표와 스탠포드대 AI연구소장, 메릴랜드 주지사,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하는 자문위원 22명의 명단 공개

-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적대국들은 악성코드 공격에 이용되는 생성 AI 및 사이버 방어력을 약화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 중임에 따라 이사회는 이러한 AI를 이용한 적대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예방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며, 주요 기반시설에 AI가 초래하는 위협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토안보부와 주요 기반시설 커뮤니티, AI 기업들이 AI로 인한 보안 위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만들 계획

4. AI 서울 정상회의 서울 선언 채택

-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AI 거버넌스의 3대 목표로 안전·혁신·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는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하여 AI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면서, 기존의 AI 안정성 정상회의의 각료 간 합의를 정상 간 합의로 격상시키고 의제를 안전에서 혁신과 포용으로 확대했다는 데 의의

* AI 서울 정상회의에는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싱가포르 정상이 참여했으며, 구글 딥마인드, 앤스로픽, 미스트랄AI,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xAI, 메타 등 글로벌 AI 기업 대표들도 참석

** 선언문 내용 전문은 9쪽의 별첨 자료 참조

- 서울 선언은 상호 운용성을 지닌 보안 조치의 중요성, 각국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협력 촉진, 안전·혁신·포용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의지,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필요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국 정상들은 서울 선언의 부속서로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AI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의 세부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도 채택
- 정상회의에 참석한 글로벌 AI 기업들은 AI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 있는 AI 개발을 약속하는 자발적 공약으로서 AI 안전 서약에 동참. AI 안전 서약에는 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활용을 위해 AI 안전연구소와 협력을 강화하고 워터마크 등 AI가 생성하는 콘텐츠 식별을 위한 조치와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 또한 AI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위해 첨단 AI 모델과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고 공동 프로젝트와 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력하며 인턴십과 교육 프로그램 등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포함

[그림 2] 윤대통령, AI 서울 정상회의 화상회의 공동 주재



**[서울 선언] 채택
'안전·혁신·포용' 3대 AI 목표 합의**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은
AI 위험은 최소화,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
혜택은 공정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선언'은 AI 거버넌스 관련 정상 간 첫 합의로
의제를 안전에서 혁신, 포용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https://www.president.go.kr/>)

5. 일본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즈 그룹 출범

-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 부대행사로 개최된 AI 행사 기조연설에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즈 그룹의 출범을 발표하면서 프렌즈 그룹이 AI로 인한 기회와 위험 대응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
- 지난해 G7의 의장국인 일본은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 생성 AI 관련 국제규범과 정보교류의 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발표하였으며, G7은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통해 모든 AI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국제 지침과 AI 개발자 대상의 행동 규범을 마련
-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49개 국가들로 구성된 프렌즈 그룹은 AI 국제 지침과 행동 규범의 이행을 지원하고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며, 일본 정부는 생성 AI로 인한 허위 정보와 같은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 출처 검증 기술의 개발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는 등 AI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도쿄에 국제협의체인 AI 글로벌 파트너십(GPAI, Global Partnership on AI) 센터를 설립하고 기술 연구와 테스트를 지원할 예정

* 49개국에는 G7 국가 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인도, 아일랜드, 라트비아 등이 포함

**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은 남반구 국가가 대거 참여한 프렌즈 그룹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에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하의 국제지침과 행동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

[그림 3] 日기시다 총리, '생성형 AI 국제기구' 출범 선언



*출처 : 네이트 뉴스(<https://m.news.nate.com/view/20240502n39533>)

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AI 사무국 설립

-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규제안인 AI법 승인에 따라 위원회 내에 집행 기관인 AI 사무국(AI Office)을 신설하였으며, 사회적·경제적 이익과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위험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AI의 향후 개발, 배포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사무국 운영의 목표로 한다고 설명
- AI 사무국은 규제준수, AI 안전, AI 연구지원, AI의 공익적 활용, AI 혁신과 정책조정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장에는 루칠라 시올리 현 EU 집행위 AI 디지털산업 담당국장을 임명하고 기술직, 변호사, 정치학자, 경제학자를 포함해 14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
- 특히 챗GPT나 제미니와 같은 광범위한 서비스에 해당되며 법 제정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범용 AI 모델과 관련해 AI 법 시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AI 개발자와 학계,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실행규범을 마련하고 범용 AI 모델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제재도 가할 계획
- AI 규제법은 AI를 위험도에 따라 수용 불가능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 등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AI 규제법이 발표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금지 대상 AI 규정을 시행하고 내년 5월부터는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의 범용 AI(AGI) 규정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 AI로 생체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시민들을 감시하거나 수사에 활용하는 행위는 수용 불가능 위협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교육·고용·인프라·사법·선거 등에 사용되는 AI는 고위험으로 분류해 반드시 사람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 또한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텍스트·이미지·영상은 제한된 위협으로 AI 생성물임을 표기해야 하며, AI를 활용한 게임 플레이나 스팸 필터 등의 앱은 최소 위협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표 2] AI 사무국에 설립된 5개 부서의 구성 내용

부서명	주요 내용
규제 준수 부서	- AI법의 통일된 적용 및 집행을 조정, 잠재적 위반 사항 제재 관리 등
AI 안전 부서	- 범용 모델의 체계적 위험 식별, 완화 조치, 평가, 테스트 접근 방법 연구 등
AI 로봇 우수성 부서	- 연구개발 지원 및 펀딩, AI 모델의 개발 및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위한 GenAI4EU 이니셔티브 조정
AI의 공익적 활용 부서	- 날씨 모델링, 암 진단, 재건 사업을 위한 디지털 트윈 등 AI가 사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AI 사무소의 국제적 참여 설계 및 이행
AI 혁신 및 정책 조정 부서	- EU AI 전략의 집행 총괄, 투자 및 동향 모니터링, 유럽디지털혁신허브(EDIH) 네트워크를 통한 AI 활용 촉진, AI 공장 설립, 규제 샌드박스 및 테스트 지원 등 혁신 생태계 육성

*출처 : 한국-EU 연구센터(<https://k-erc.eu/2024/06/europe-trends/18974/>)

7. 중국 대학의 AI 교육과정 확대

- 중국 대학들의 AI 교육열이 고조되는 현상에 따라 중국 상하이의 푸단대학(復旦大學)은 전교생이 참여하는 과학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올해 가을 학기에 60여개 이상, 내년에 100개 이상의 AI 관련 강의를 새로 신설하고 교수진 64명을 충원할 계획. 이는 전국적으로 디지털 활용 능력을 향상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계획 및 신형 산업 전반에서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AI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AI 전략 목표에 부합하기 위함으로 해당 교육과정은 스탠포드, 카네기, MIT의 교육과정을 본떠 AI 기초과정과 필수과정, 주제과정 등을 개설할 예정
- 학부생 1만 5천여 명과 대학원생 3만 6,700명을 보유한 푸단대학은 AI 연구소 설립이 아닌 전교생이 참여하는 과학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상하이 데이터과학핵심연구소의 소장인 샤오양화 푸단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는 AI 교육은 디지털 역량을 넘어 인간의 생존과 발전이 달린 문제 AI 시대의 교육을 재정의하기 위해서는 AI를 다양한 커리큘럼에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의 여러 대학들은 교육부를 포함한 유관 부처들과 함께 디지털 활용 능력과 기술 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인재 육성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국가 AI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계획. 난징대학(南京大学)은 신입생 AI 활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AI 일반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필수 AI 과정 및 AI와 다양한 교과목을 통합한 학제간 과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베이징우전대학(北京邮电大学)은 모든 학부 신입생에게 AI 입문, 컴퓨팅 입문과 같은 필수과정을 도입해 AI 일반 교육을 시행한다고 발표

■ 시사점

- 대다수의 국가들은 자국민에 대한 AI 교육 등을 통해 AI의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AI가 초래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제화를 통해 AI를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오픈 AI, MS 등 AI 관련 기업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도 정부 비판이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여론 선동의 위험성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 국내에서도 그간 AI 규제에 대한 법제화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해외의 사례와 달리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지하는 규제를 펼치기 보다는 조금은 느슨한 방향으로 규제를 시행. 그러나 법적 책임 소재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와 악용을 방지하는 등 AI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AI 법안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
- AI에 대한 법제화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AI 규제는 AI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업계에서는 법제화를 추진하되 지나친 규제보다는 산업지원과 균형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이며 정부는 자율규제와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규제 기조를 유지해야 하고 업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

[별첨]

AI 서울 정상회의 서울선언 및 의향서

2024년 5월 21일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세션 참여자들의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

1. 2024년 5월 21일 AI 서울 정상회의에 모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영국, 미합중국을 대표하는 세계 지도자들은 AI의 전례 없는 발전과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마주하여 AI 분야에서 국제 협력 및 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공동의 헌신을 확인한다.
2. 2023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AI의 안전·혁신·포용성이 상호 연계된 목표로서, AI 설계·개발·배치·사용이 제기하고 있거나 제기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이 우선순위들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3. 우리는 안전하고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AI 설계·개발·배치·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AI로부터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야기되는 폭넓은 위험들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 기반 접근법과 일치하는 AI 거버넌스 체계들 간의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체들에 대한 히로시마 프로세스 국제 행동강령의 운용을 지지하는데 지속 집중한다. 우리는 프론티어 AI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단체들의 특별한 책임을 인식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프론티어 AI 안전 서약」을 환영한다.
4. 우리는 이 선언 참여국들이 AI 안전연구소, 연구 프로그램 그리고/또는 감독 기관들을 포함한 기타 유관 기관들을 설립하기 위해 진행하거나 계속 진행 중인 노력을 지지하고, 이러한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육성함으로써 안전 연구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고 모범 관행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선언의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환영한다.

5.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AI를 활용하여 국제 난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법치주의 및 인권·기본적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 및 증진하고, 국가 간의 그리고 국내적인 AI 및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향상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진전을 포함하여 AI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AI 안전·혁신·포용성을 향상시키는 국제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
6. 우리는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 생태계들을 육성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들을 포함한 정책·거버넌스 체계들을 지지한다. 이 체계들은 인간의 창의력과 AI의 개발·사용간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사회·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성별 다양성을 증진하며, 상업적·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AI 시스템들의 전주기에 걸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 및 인프라의 개발 및 사용을 증진해야 한다.
7. 우리는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 생태계 육성을 위해 정부·민간·학계·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중이해관계자 간 적극적 협력 및 초국경적·학제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I의 혜택과 위험에 모든 국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AI 거버넌스 관련 대화에 폭넓은 국제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것이다.
8. 우리는 유엔 및 산하기구, G7, G20, OECD, 유럽평의회 및 GPAI 등 여타 국제 이니셔티브들에의 관여를 통해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히로시마 AI프로세스 프렌즈 그룹을 평가하고, 최근 OECD AI 원칙의 갱신 및 UN 총회에서 최근 컨센서스로 채택되어 AI 시스템들에 대한 안전장치의 필요성과 선의를 위한 AI 개발, 배치, 사용의 중요성에 관한 글로벌 이해를 공고히 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안전하고 보안성 있고 신뢰성 있는 AI 시스템의 기회의 활용” 제하 결의를 환영하며, 2024년 9월 미래정상회의에 앞서 글로벌디지털컴팩트에 관한 논의를 환영하며, 유엔사무총장 직속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최종 보고서를 기대한다.
9. AI 안전, 혁신, 포용성을 촉진하는 AI 거버넌스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고위급 포럼으로서의 AI 정상회의 가치를 평가하며, 우리의 세 번째 모임으로서 프랑스가 개최하는 AI 행동 정상회의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 미·중 기술패권 경쟁 더 격해지나...14일 제네바서 첫 AI 회담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10732>
- 미국, 중국에 AI 오용 우려 제기..미·중 첫 AI 회담 개최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695>
- 美 “中, 첨단 AI칩 꿈도 꾸지마” ... 3국 통한 우회로까지 막는다
<https://www.mk.co.kr/news/world/11039941>
- 오픈AI·MS·알파벳 ‘빅테크 거물’ 참여...美 AI안전보안이사회 결성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655>
- 알트먼·젠슨 황 등 미국 정부 ‘AI 안보이사회’ 자문위원 임명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175>
- 기시다,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즈 그룹 출범 선언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2174051081?input=1195m>
- “日 정부, AI 사업자 대상 법률규제 도입 검토 돌입”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03502686?OutUrl=naver>
- 푸단대 “AI 강의 100개 개설” ...中대학들 AI 교육열 고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7046200009>
- EU, AI 법 집행 기관 ‘AI 사무국’ 설립... “범용 AI 규제에 초점”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167>
- EU, 내달 ‘AI 사무국’ 개소...기술·법률 전문가 140명 투입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530/125196315/1>
- 尹, AI 서울정상회의 개최...안전·혁신·포용 ‘AI 서울선언’ 발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521001156>
- AI 정상회의 ‘서울 선언’ ... “글로벌 거버넌스 새 방향 제시했다”
<https://zdnet.co.kr/view/?no=20240522163637>

SPC 'ANGEL'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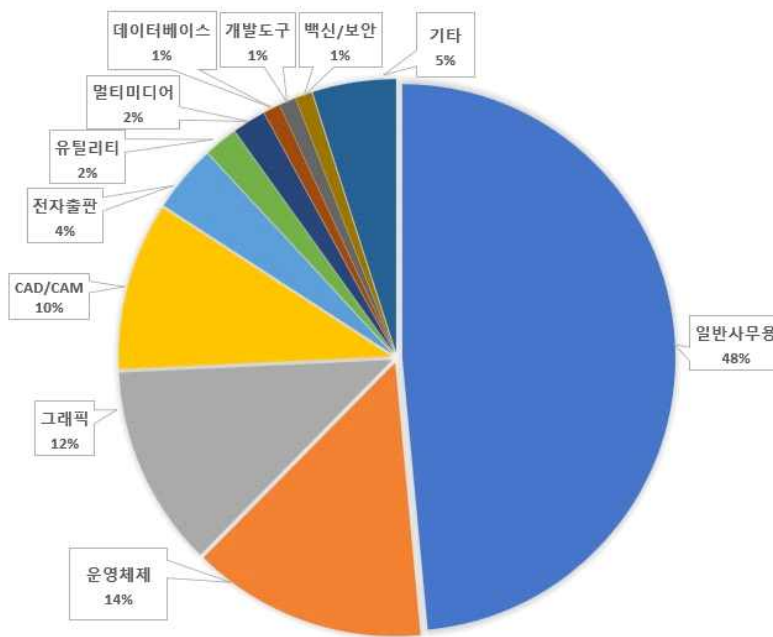
월 1회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 제보 'ANGEL' 서비스 7월 통계 현황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7월 한 달간('24. 7. 1. ~ 7. 31.) 'ANGEL (불법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는 총 167건으로 나타남
- SW 용도별로는 일반사무용 81건(49%), 운영체제 24건(14%), 그래픽 20건(12%), 설계(CAD/CAM) 16건(10%), 전자출판 7건(4%), 유틸리티 4건(2%), 멀티미디어 4건(2%), 데이터베이스 1건(1%), 개발도구 1건(1%), 백신/보안 1건(1%), 기타 8건(5%) 순으로 제보가 접수됨

[그림] SPC 'ANGEL(불법제보)' 서비스 2024년 7월 통계 현황

2024. 7.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통계
-SW 용도별 제보 건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018년 11월부터 제보시스템과 제보 방식의 편의성을 개선한 불법복제 SW 제보 시스템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4-17호> 발간일은 9월 10일입니다.